

민주당 당심 “尹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차기 지도부 원해”

프로

野 전대 지역 경선 순회현장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野 당원들 파란 옷차림으로 모여
 李 독주, 尹 견제 원하는 당심 반영
 최고위원 선거 치열한 경쟁 대해선
 적합한 李 파트너, 능력 평준화 분석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4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의 상징 색인 파란색 옷차림을 하고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 당원들은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들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응원전을 펼쳤다. 사진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

“저에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이 길거리로 나온 계기가 됐다. 국제적으로도 국내외적으로도 경제, 민생 모든 것이 풀이 아니다. 그래서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 바라는 건 전투적인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지역 경선 순회 현장에 있었던 윤 모씨(50대·여성)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상징 색인 파란색 옷차림을 하고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었

다. 일부 당원들은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응원전을 펼쳤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당원들 대다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 모씨(20대·남성)는 “정당이라는 건 권력을 얻고 선거에 승리해서 당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핵심”이라며 “민심의

힘을 얻어야 하고 당원들이 투표하는 전 당대회와는 달리 전 국민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당원들은 윤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를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이 모씨는 “윤 정권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단일 대

오로 투쟁하고 맞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라고 판단한 당원들이 도와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모씨(50대·남성)도 “일부에서는 민주당에 강성 당원들만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50만 명이나 되는 당원이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과 거의 닮아 있는 여론 지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모씨는 “밖에서 보면 팬덤이니 윗리건이니 하는데, 저희들이 무작정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성남시장 시절부터의 행적이나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훑어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행정이구나, 추진력 있구나’라고 각자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후보가 지난 3일 정봉주 후보를 역전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최고위원 선거에 대해 당심은 이재명 후보에 적합한 파트너를 향해 있었다.

윤 모씨는 “김 후보가 이 후보에 탁월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후보 옆에서 힘을 실어주고 (윤 정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사들을 고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모씨는 “개인적으로는 고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당 대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한 누적득표율은 4일 기준 이재명 후보가 86.9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두관 후보(11.49%), 김지수 후보(1.55%)로 집계됐다.

최고위원 선거 누적득표율 1위는 김민석 후보로 17.58%를 기록했다. 다음 순서로는 정봉주 후보(15.61%)·한준호 후보(13.81%)·전현희 후보(12.59%)·민형배 후보(12.31%)·김병주 후보(11.82%)·이연주 후보(11.17%)·강선우 후보(5.12%)가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최고위원 선거 권리당원 투표에선 민형배 후보가 약진했다.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민 후보는 광주에서 27.77%를 득표하고 전남에서도 21.68%를 득표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전당대회는 오는 18일에 진행되며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결과는 대의원 투표 14%(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56%(온라인+ARS),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발표한다.

／글·사진=윤도현 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개원 후 합의처리 법안 ‘0건’… 野, 오늘 임시국회 소집

접수 법률안 2502건 중 통과안 6건
 與, 법안 표결 때 항의 의미로 불참
 野, 오늘 노란봉투법 처리 추진 예정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품고 출범한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간 합의 처리한 법안이 ‘0건’에 불과하지만, 거대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고 있어 ‘쟁쟁용’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는 거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입법 강행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돼 왔다. 또, 거대 야당이 재의결 의결정족수까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야가 합의 없이 통과한 법안은 여지 없이 폐기 수순을 밟는 모습을 보였다.

21대 국회 막판 여야는 ‘이태원 참사



추경호(앞줄 왼쪽 일곱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정치, 불법파업조장 중단’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특별법’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했으나, 여야 대립이 첨예한 22대 국회에서는 ‘합의’란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8월4일까지 국회의

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법률안은 2502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6건에 불과하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 6건은 채 해병 특검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채 해병 특검법은 이미 재의결 부결로 폐기수순을 밟았고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은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6건의 법안을 표결할 때 항의 의미로 불참한 바 있다.

8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쳤으나,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결시켰고, 8월 임시회에서 처리를 노리는 것이다.

최소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기어이 상정한 ‘불법 파업조장법’은 산업계 전반과 노사관계 등 그 근본을 뒤흔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선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

금에 와서야 쪽주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정부여당의 뜻을 돌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못나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5선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인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공방과 양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으로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尹, 오늘부터 여름휴가… 군부대·전통시장 등 방문

방송4법 등 거부권 행사여부 고심
 “국무위원도 휴가 모두 가라” 독려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5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나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야당 단독으



로 통과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기간 동안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숙고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또, 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강행을 예고함에

따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얻는 방법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방송4법은 KBS·MBC·EBS의 이사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학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인 야당 주도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말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을 지급해 내수 진작을 꾀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실시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건전기조를 해칠 수 있고, ‘처분적 법률’(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

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폐기 수순을 밟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부로부터의 대정부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티몬·위메프발 환불·정산 지연 사태, 가계대출 급증, 광복절 특사 등 시급한 현안도 휴가 중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